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2024년 1월 31일(수) 11시, 경찰청 앞

- 공동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연대, 블랙리스트이후, 정보공개센터, (사)오픈넷,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1. 피해언론인 발언 : 여미애 (레디앙 기자), 하민지 (비마이너 기자)
2. 언론의 자유 탄압의 심각성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3. 언론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권리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4. 표현의 자유 탄압 측면 :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5. 전장연 탄압의 현실 : 조재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6. 피해예술인 (소수자표현의 자유) : 장호경 (영상활동가, 감독)
7. 69개 단체 공동성명문 낭독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김조은(정보공개센터), 손지원(사)오픈넷

1.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행동(선전전, 기자회견)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퇴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와 경찰은 평화로운 기자회견에서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활동가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 24일에는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게 무슨 기자, 끌어내”라며 기자임을 알면서도 모욕하며 취재방해 등 언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2. 이러한 교통공사와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22일에도 비마이너와 경향신문 기자의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영상감독의 촬영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 침해는 전장연 선전전 및 기자회견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3. 특히 교통공사의 물리력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교통공사 보안직원들은 공권력도 아니기에 헌법 상 권리인 신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

적인 교통공사의 물리력 행사를 제지하지 않고 함께 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 4. 언론에 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제서야 교통공사는 개별적으로 기자에게 사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무마용일 뿐입니다. 재발방지책도 없으며 경찰은 한마디 사과조차 없습니다.
- 5. 이에 인권단체, 언론단체 등 69개 단체는 공동규탄성명을 발표하며, 10개 인권 및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주최하였습니다. 69개 단체가 참여한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공동성명문과 발언문, 사진을 첨부합니다.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기자까지 물리력으로 제압해서 잠재우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1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주최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복직 투쟁’ 기자회견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퇴거 조치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통공사와 경찰은 참가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현장을 취재하던 레디앙 기자와 비마이너 기자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신원확인을 요구해 기자임을 밝혔음에도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지원센터장은 “이게 무슨 기자, 끌어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기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교통공사 보안직원과 경찰은 기자의 신체를 잡아 강제로 현장에서 끌어냈다. 장애인, 인권활동가 시민 등 연대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이제 기자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번 교통공사와 경찰의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는 법적 근거도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도 없는 폭력이다. 교통공사 직원들은 공권력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철도안전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위에 설 수는 없다. 또한 개인의 몸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은 그만큼의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 평화로운 기자회견이나 선전전에 10배 이상의 보안직원을 동원해 기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해 사건 현장에서 끌어내는 것은 취재방해이자, 언론의 자유 침해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저 보고만 있거나 폭력적인 격리 조치에 합세하는 행태를 보였다. 24일 벌어진 기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첫 사건이 아니다.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 기자회견을 혜화역 승강장에서 할 때도 취재하던 비마이너 및 경향신문 기자들이 쫓겨났다. 기자임을 여러 차례 밝히며 명함을 건넸음에도 쫓겨났다. 또한 장애인영상을 촬영하던 감독도 여러 차례 폭력적으로 쫓겨났다.

우리는 이번 기자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기조를 줄곧 유지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 경찰이 최소한의 법과 인권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으니, 공권력도 아닌 교통공사가 사적 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데에까지 간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교통공사와 경찰의 언론사 기자에 대한 폭력이 선별적이며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자임을 밝혔음에도 교통공사는 레디앙이나 비마이너처럼 인터넷 매체이거나 경향신문처럼 정부에 우호적인 매체가 아니면, 지체없이 취재방해를 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정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며, 소수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억압하는 것이다.

끝으로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언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언론의 자유 침해는 그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만 남고, 사회적 소수자처럼 힘없는 집단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와 불평등, 차별과 혐오는 심각해질 것이다.

교통공사는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해당 기자에게 전화해 사과했다고 한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구체적인 재발방지책도 없을 뿐 아니라 전장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언론 무마용 사과를 원치 않는다. 또한 경찰청장은 아직까지 사과조치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작년 5월부터 본격화된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이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음을 고려할 때, 경찰이 집회시위의 보장으로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언론의 자유 보장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언론의 자유 탄압을 비롯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도 할 것이며, 국제인권기구 등에도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이제라도 서울교통공사는 법적 근거 없는 물리력 행사를 중단하고 해당 책임자를 징계하라! 개별적인 사과 말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수립하라!
- 경찰청장은 공식 사과하고 경찰은 언론사 기자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권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하라!

2024년 1월 3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정보공개센터, (사)오픈넷,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광주녹색당,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너머서울(강동연대회의,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노동광장, 서울녹색당, 서울민중행동, 서울지역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체 추진모임, 서울진보연대, 서울평등의길, 용산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이음나눔유니온, 인디학교,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환서울,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네트워크, 진보당 서울시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홈리스행동, 희망씨), 노동당,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규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고 김형주 님 유가족일동), 대항로영상활동가모임, 미디어몽구, 비마이너,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스튜디오알, 시민건강연구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진보당 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녹색당, 청소년녹색당,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전국 69개 단체)

[발언문]

○ 하민지 (피해언론인, 비마이너 기자)

안녕하세요.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마이너 기자로서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선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2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 사태가 벌어졌고, 비마이너는 문건에 ‘전장연 당 기관지’, ‘전장연 여론전 용도’, ‘언론플레이용’으로 언급됐습니다. 이에 비마이너는 서울교통공사가 비마이너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교통공사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사과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어제 오후, 서울교통공사 언론팀장이라는 분이 사과를 원한다면서 제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마이너 퇴직기자에게까지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마이너 기자로서, 최영도 고객센터지원센터장으로부터 퇴거당한 당사자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지난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지하철에 타려던 장애인 노부부가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지 23년 되던 날, 전장연이 주최한 제57차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취재하러 혜화역에 갔습니다. 최영도 센터장이 신분 증명을 요구하길래 명함을 줬더니 최 센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민지 기자님, 비마이너 기자시죠? 전장연 계간지예요. 퇴거시켜.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듭 항의했지만 최 센터장 지시에 순식간에 몰려온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에 의해 승강장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8시에 시작됐는데요. 저는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15분 만에 쫓겨났습니다.

이후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합실에서는 승강장에서 들려오는 비명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뒤로 쫓겨나온 활동가들에게 지금 아래 승강장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고 계속 물어보며 취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반 정도를 대합실에 머무르면서 간접적으로 취재해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에 기사에는 “알려졌다”, “전해졌다”라는 부정확한 표현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 독자에게 현장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이런 부정확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빈곤 독립언론 비마이너는 2010년 창간 이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상의 부조리함에 맞서 싸우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장, 쪽방주민과 거리홈리스가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장, 그리고 그들이 투쟁하며, 목소리 내며 싸우는 현장 등을 언제나 취재해 왔습니다. 이 현장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기 힘든 현장들입니다. 비마이너는 ‘마이너’하다고 치부되는 목소리들을 기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독립언론으로서 10년 넘게 그 소명을 다 해 왔습니다.

‘전장연 당 기관지다, 계간지다’ 하는 표현들은 비마이너에게는 엄청난 명예훼손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취재기자들을 강제퇴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저는 연극영화학을 전공했는데요, 1개의 영화를 100명이 보면 100개의 영화가 생긴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렇듯 현장을 찍는 카메라

가 많을수록, 현장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현장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며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는 다양한 매체의 기사와 콘텐츠를 비교해 보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에 보다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고, 현장의 면면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취재기자들을 내쫓는, 강제퇴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독자와 시청자들이 현장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진실에 상세하게 접근하고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개별 사과 말고 서울교통공사 명의의 공식 사과를 원합니다. 제 연락처 수소문해서 전화해서 개별 사과하지 마시고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취재기자에게 그리고 다큐멘터리 독립 감독님들에게 사과해 주시기를 엄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가 수도 없는 투쟁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오늘 모인 경찰들 숫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평소에 잘 이게 왜 중요한지 평소에 잘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표도 잘 안 납니다. 조금 망가져도 그런데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의 권리가 깨져 나가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혹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왜곡해서 사회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또 다른 시민의 목소리를 지워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거기서 시민의 눈과 귀인, 언론사 기자들을 탄압하고 드러내고 폭력적으로 쫓아내서 그들이 가리고자 하는 목소리는 또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방송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비단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제도권 언론 전체가 탄압받고 있고 아마 올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게 될 세계 언론자유 지수는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사회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똑같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언론은 시대의 목격자라고 합니다. 진실의 목격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의 파수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과 기자들을 현장에서 분리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진실을 사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범죄자들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공사가 거꾸로 범죄자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노조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하철 현장에서 시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언론 자유의 헌법 가치를 파괴한 경찰과 지하철 공사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권리이자 안전입니다. 공사가 보장해야 할 것은 이 시간에도 가로막히고 있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본권과 통행권입니다. 이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몰아내고 시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지탄받아야 하고 규탄의 대상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거

나 탄압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언론 자유 탄압한다고 날뛰다고 해서 일선의 경찰과 공사 직원들까지 같이 날뛰면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이 싸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도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외쳐주시고 끝까지 취재하고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곧 역사가 되고 새로운 질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투쟁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기자에 대한 물리적 제재, 격리조치는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자유를 그리 많이 부르짖는 정부에서 시민의 자유, 언론사 기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가 사실은 자유의 본령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자유주의적 자유조차 자유를 일컬을 때는 권력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론을 말한 밀은 자유론 책 서두에서 이렇게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바로 'liberty 자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감시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21조 3항에서 ㉔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번 기자에 대한 물리적 제재, 취재현장에서의 폭력적 격리조치는 사실상 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사 기자임을 밝혔음에도 소수자를 대변하는 언론이나 인터넷 언론인 것을 알고 고객센터장은 이격조채했습니다. 만약 조종동이었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검열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 심각한 것은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잠재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음으로써 처참한 현실이 은폐됩니다.

그래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2020년에 발표한 일반논평 37호(집회시위의 권리)에서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려면 언론인, 인권옹호자, 선거감시자, 기타 집회의 감시 또는 보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이들은 규약상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까지 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번 언론인에 인권침해는 윤석열 정부의 입막음 정책, 즉 표현의 자유 통제정책,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가 지속되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인권활동가들이 하는 말 중에 “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면 모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사람의 인권침해를 사회가 용인할 때 다른 사람의 인권 후퇴, 다른 영역의 인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는 언론의 자유 침해로 이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확장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끝으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늦게서야 기자

들에게 사과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닙니다. 공권력도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언론의 자유 침해인데 공기업 직원이 사적 경비대에 지나지 않는 보안과 직원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엄청난 인권침해입니다.

앞서 말한 평화적 집회의 권리 일반논평에서도 한국 경찰이 자주 자행하는 고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봉쇄 또 케틀링(kettling)은 법집행공무원이 어느 구역의 집회 참여자를 에워싸고 가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성과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제 폭력 또는 그 구역에서 시작되는 임박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는 기자와 장애인을 가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폭력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지 오래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다시는 참가자들을 가두고 이격시키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작년 6월 진행된 서울국제도서전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준 국제 행사입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상처로 남은 행사였으며, 국제라는 이름이 들어간 최악의 범죄현장이었습니다.

당시 홍보대사로 선정된 오정희 소설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실행자였습니다. 오정희 소설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제5기) 위원이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이미 명백하게 진상규명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며, 이와 관련해서 2018년 국립한국문학관 위원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서울국제도서전의 얼굴이자 상징으로 내세운 출혈과 문체부에 항의하기 위해 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은 도서전이 열리는 곳에 들어갔고, 경호인력이 원하는대로 피켓도 감추고 들어갔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대통령경호처의 과잉 경호였으며, 온갖 기술이 난무하는 폭력잔치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 직후부터 문화예술인들의 관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감시, 통제, 배제하려 했고, 개막식 장소에 다가갔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인 과잉 경호를 시도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다수의 예술인들은 처음부터 도서전에 대한 존중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출판문화협회와의 ‘시위’가 아닌 ‘대화’를 원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과잉 경호와 폭력이 이번 사태를 낳았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해당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보나 상황에 대해 파악하려는 어떠한 과정도 없이 오직 김건희 여사의 행사 의전을 위해 국제도서전에서 문화예술인들과 언론인들을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블랙리스트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국가가 행정권력 및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하고 배제하고, 검열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은 그때의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목숨과 같은 표현의 자유는 후퇴하였고, 여전히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는 어떠한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차 사건 및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연출자 및 가수 이랑의 출연 배제한 사건,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금정굴 이야기>의 방송이 불허 사건 등 여전히 검열과 배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계속 외치고 있는 자유는 문화예술계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투쟁 이후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싸움을 한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유인촌씨가 돌아와 다시금 긴장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의 최전선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예술계를 넘어서 더 많은 사회적 블랙리스트들과 연대해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재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서울장애인 차별 철폐는 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재범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전장연은 23년 전에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주 터무니 없고 여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지하철에서 집회를 할 때 지하철 도안 관과 국익지원센터장이 저희를 협박하고 쫓겨내고 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경찰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고, 공익지원센터장이 야 이것 좀 끌어내라고 하면 배우자들이 우르르 와서 아무 생각도 없는 로봇이나 기계처럼 저희들을 쫓아냈고, 현행범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을 체포했습니다.

여기 경찰관님들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집회는 자신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집회라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권리가 왜 경찰들에 의해서 도시철도공사 통합반이나 고객지원센터장들을 위해서 침해당하고 억압당하고 침탈당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오랜 시간 지하철에서 투쟁했습니다. 주간에 지하철을 결착시킨다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찰들에게 연행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지하철에서 침묵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민변에서 진행하는 도시교통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친북 시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그거는 변호사님들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아니고 경찰들이 얼마 전 장애인 활동사를 연행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판사님도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구속을 시키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연은 20년이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장애인 도전권을 위해서 20년 전에도 또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바닥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에 투쟁했던 사안들을 20년 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후퇴되고 낙후되고 있는 사회인지를 아주 정렬하게 보여주는 시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경찰분들 만약 경찰분들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다면 ‘그래 나 나 오늘 해고 당했구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날 해고시키겠지’라고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불합리하고 불법적으로 해고당했기 때문에 노동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를 토대로 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장을 죽이는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경찰들과 도시철도공사는 현행범 저놈들 쫓아내 나는 막말로 우리들을 무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좌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에서 침묵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활동가들이 체포될 위험에 처했었고, 내일도 또 모레도 제모의 위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야겠습니다.

○ 장호경 (다큐멘터리 감독)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장호경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 현장을 기록하다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겪은 많은 독립미디어 제작자분들,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을 대표해서 마이크를 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제퇴거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미디어 제작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는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는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이 침묵선전전으로 바뀌고 며칠 상간에 활동가들에 대한 연행이 대거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그 전에도 미디어 제작자들에 대한 취재 방해 행위 (카메라를 손이나 몸으로 가린다거나 촬영장 안으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밀어낸다거나) 하는 행위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그 양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12월 1일 (1인), 12월 8일 (2인), 1월 5일 (2인), 1월 22일 (2인)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두 명의 미디어 제작자가 강제퇴거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이렇습니다.

한 감독님께서서는 지하철 선전전이 시작되자마자 누군가의 ‘카메라부터 치워’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끌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왜 나가야 하나라고 따지니 ‘서 있기만 해도 안 된다.’, ‘전장연의 입장을 대변하는 촬영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왜 끌려 나가야 하나라고 따지니 ‘당신 불법 시위대잖아!’라고 샷대질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호가 쓰여진 조끼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카메라 들고 있지 않느냐. 촬영 중이라고 항변해도 ‘내가 불법 시위대라고 하면 불법시위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저를 밀쳐 뒤로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를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역사 밖으로 끌어내던 지하철 보안관들은 내가 왜 나가야하는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끈질기게 요구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원칙이 있고, 무슨 합리성이 있습니까? 무슨 정당성이 있습니까? 소리지르고, 욕박지르고, 샷대질하고, 물리력으로 끌어내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내가 나가라면 나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다큐멘터리, 독립미디어 제작자들은 미디어 매체를 시민 개개인이 소유함으로써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며, 주류 언론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어땠습니까? 철도안전법은 자의적으로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고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있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해석해서, 아니 최소한으로 해석한 것도 아닙니다. 철도안전법만이 그곳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유로운 시민의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체를 구속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엄연한 불법행위를 버젓이 보고만 있고 심지어 도와주었습니다.

지하철 선전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현장을 기록하는 카메라부터 강제퇴거를 진행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현장 기록을 막습니까? 이것은 카메라가 사라진 이후의 전장면 활동가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겨진 휠체어 이용 활동가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전환해 밀어내는 반인권적 집행 방식, 그리고 장애인의 부자유한 신체를 역으로 이용하여 교묘하고 저열하게 행해지는 폭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자 카메라를 끌어내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집행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오히려 더 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공무집행이, 공권력이 제대로 정당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막고 쫓아내는 것은 당신들의 행위가 정당치 않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해로 23년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삶과 투쟁의 현장을 기록하는 활동을 합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요즘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참사를 기록할 때도 이런 일을 겪진 않았습니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심지어는 경찰들의 모습에서 흡사 그 때의 철거지역 용역깡패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사회 필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과 경찰들에게서 사적폭력을 쓰는 용역 깡패들의 언어와 몸짓을 보게 되는 것은 매우 참담하고 우려스럽습니다. 고삐풀린 공권력이 어떤 일들까지 벌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저에게 사과의 뜻을 보내왔다고 그러더군요. 개인적인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언론인들과 독립미디어 제작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다시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전장면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